

한국의 아세안 연구(2001-2020)

- 리뷰와 제안*

배 기 현**

요약

이 글은 지난 20년간 국내의 아세안 및 아세안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지역 다자협력체 연구 경향과 특징 및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대아세안 외교 및 아세안 지역통합 구상 관련한 정책적 모멘텀에 따라 연구 동향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살펴보고,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아세안 연구 경향에서 발견되는 경향성을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등 이슈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를 통해 20년간의 아세안 연구가 얻은 것과 과제를 파악하고 연구자들이 향후 주목할 만한 연구과제 및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아세안,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다자협력, 문헌 리뷰

I. 서론

아시아를 연구하고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동아시아 내 강대국들의 권력지형 변화와 이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는 늘 핵심적인 논의 대상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니다(NRF-2019S1A5C2A01080959). 좋은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부교수, khbae@sogang.ac.kr

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강대국들의 갈등과 협력의 장으로서, 때로는 이러한 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행위자로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들 10개국은 1990년대 이후, 보다 본격적으로 정치와 경제 행위를 위한 집합적 주체로서 아세안(ASEAN)을 발전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강대국 정치경제에 영향을 받고 대응하는 중소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다자 자유무역질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체로서 의미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세안을 보다 제도화된 정치경제 공동체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동남아시아의 외교적, 경제적 중요성은 대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런 까닭에 아세안을 위시한 동남아의 다자지역주의 및 제도화에 대한 연구의 폭과 깊이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문사회 연구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발전을 두고 김형중(2017)은 ‘아세안학’의 가능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글은 지난 20년간 아세안 및 아세안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지역다자협력체 연구들의 경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김형중(2017)은 4년 전 한국의 아세안 연구 리뷰물을 통해 한국의 아세안 연구 역사를 개괄하고 주요 학위논문과 학술지 연구물, 단행본 출판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 글은 한국의 아세안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전 리뷰와의 차이점이라면, 이 글은 지난 20년(2001년-2020년) 동안 한국의 전문 연구자들이 출판한 학문적, 정책적 기여물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한다. 리뷰의 범위를 동료 검증을 받은 학술 논문 중심으로 좁히고, 시기를 더 좁혀서, 한국의 아세안 연구물들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나 강점, 또는 한계를 살피는데 더 주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치외교, 경제, 문화사회 이슈에 따라, 그리고 시기에 따라 이들 아세안 연구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 주목할 만한 연구경향을

정리하며, 앞으로 보강되어야 할 지점들과 발전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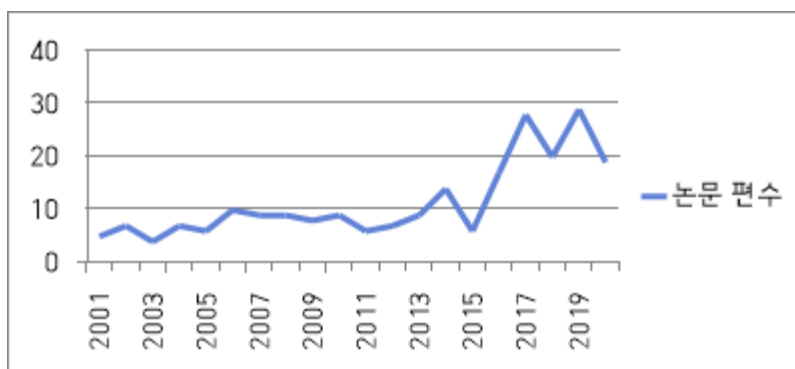
이 리뷰에서 저자는 한국의 대표 학술연구 플랫폼 RISS, DBPIA, 한국학술정보에서 ‘아세안,’ ‘ASEAN,’ ‘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구물을 검색하고, 그중에서 2001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KCI 등재 및 KCI 등재후보 저널에서 출판된 연구물을 추려 검토하였다. 이 글은 동남아 지역 다자지역협력 및 경제통합 관련 아세안 및 아세안 주도협의체를 분석하는 글들과 초국적 성격을 가진 아세안 연계 지역 거버넌스 연구만을 포함시키고자 했으며, 동남아 내 양자 수준의 외교 문제 또는 경제 협상을 논하는 연구는 제외했다. 또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동남아시아를 대체하기 위해 아세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연구물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지역주의의 결과물이자 동남아시아 내 다자협력이 실천되는 지역 거버넌스의 장으로서, 그리고 외교와 협상의 단위로서 아세안을 살피는 연구물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우선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아세안 연구물의 양적 성장 관련하여 시기별, 이슈별 동향을 살펴본다. 특히 한국의 대아세안 외교 및 아세안 지역통합 구상 관련한 정책적 모멘텀과 관련해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살펴보고,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아세안 연구 경향에서 꾸준히 드러나는 특징들을 분석한다. 이에 더하여,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등 이슈 영역별로 나누어, 아세안 연구의 경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본 리뷰가 주목하는 특징을 기반으로 아세안 연구자들이 향후 주목할 만한 연구과제 및 방향을 제안한다.

Ⅱ. 아세안 연구의 양적성장(2001-2020)

동료검증을 거쳐 학술지에 게재된 아세안 연구물은 2001년 이후 20년간 그 숫자가 230여 편에 달한다. 특히,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편수는 2015년부터 뚜렷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는 아세안 연구물이 매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면, 2014년 처음으로 그 수가 두 자릿수로 늘어났고,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에 시동을 걸면서 2017년 이후 양적으로 폭증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국내 아세안 연구 게재논문 추이(200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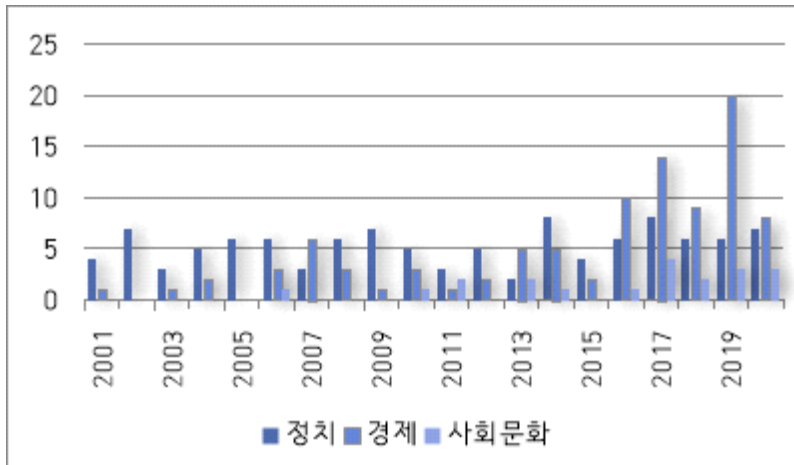


출처: 저자 구성

특히 정치와 경제 분야 아세안 연구들의 태동과 발전은 한국 정부의 정책적 모델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2000년대에는 주로 아세안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거나 한국 정부 및 사회가 관심을 둘 만한 동남아 지역주의 및 외교 주제를 분석하는 글들이 아세안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정책 영역으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표출되기 시작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를 반영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 이후에도 2003년 아세안 공동체

건설 계획이 수립되고,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신아시아 외교를 통해 이 지역의 경제공동체 가능성을 한국 기업의 기회로 인식하면서 남다른 공을 들인 바 있다. 또한 아세안 정부들이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건설을 선포하고 대외적인 홍보에 박차를 가하면서 정치외교적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수요는 학계의 관심으로 연결되었다. 특히 해당 정책의 정치외교적 중요성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정치 및 국제관계 분과에서 동남아와 동아시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2000년대 초반부터 발표되었고, 그 이후로도 매년 5-7편씩 관련 논문이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그림 2).

〈그림 2〉 국내 아세안 연구논문 이슈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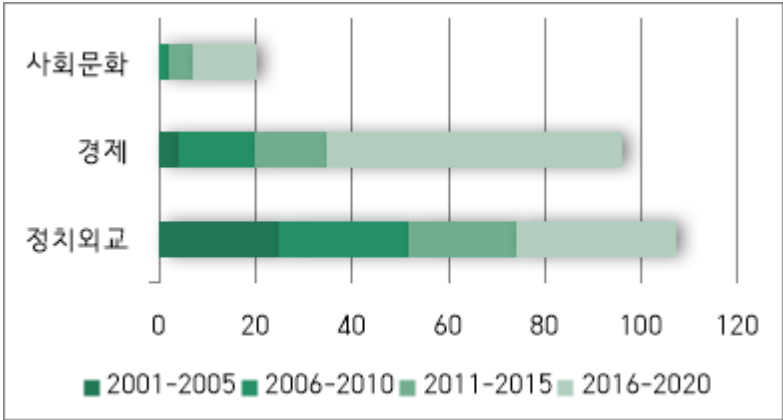


출처: 저자 구성

한편, 아세안 경제공동체 논의가 보다 가시화되는 2010년대 중반부터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 성과가 양적으로 급증하면서, 이후 아세안 관련 연구물의 축적은 경제 이슈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3은 이슈별 아세안 연구물을 5년 단위로 나누어 양적 추이를 보여주는 데, 경제학에서 주로 논의하는 담론 및 분석틀을 활용하여 아세안 관련 무역, 금융, 개발 이슈를 사례로 다룬 연구물 중 약 63%가 최근 5년(2016-2020년)에 집중되어 있다. 정치외교 분야의 아세안 연구물이 20년 동안 양적으로 변동폭이 약했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아세안 관련 연구물의 양적인 증가폭이 컸던 결정적인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정치외교 및 경제 이슈에 비교하여, 이주, 노동, 미디어, 교육 등 초국적 연계성과 그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저조하다. 경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최근 5년 동안 연구물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타 분야와의 상대적 격차는 여전히 크다. 이슈별 경향성에 대해서는 아래 4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그림 3〉 시기별, 이슈별 아세안 연구 분포도



출처: 저자 구성

Ⅲ. 아세안 연구의 분과 주도적 양상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아세안 연구는 해당 지역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적 모멘텀에 연결되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는 아세안 연구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촉진제 역할을 해왔지만, 그와 더불어 정책 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데 목적을 둔 결과물의 비중을 늘리기도 했다. 지난 20년간 국내 아세안 연구는 각 분과별 학계에서 발전한 이론적 담론에 참여하거나 기여하는 연구에 비해, 정책계 또는 비즈니스 섹터를 주요 오디언스로 두는 정책적 연구물의 비율이 57.2%로 더 높게 나타났다.¹⁾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론적 기여를 지향하는 연구물뿐 아니라 각 분과별 담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정책 연구물도 마찬가지로, 각 연구자의 분과전공에 따라 관심 주제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아세안 연구물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제의 폭은 확장되기보다 제한적으로 남아있다(다음 장에서 추가 논의 예정). 분과별 이론/학술 지향적 연구물의 경우, 주요 오디언스가 각 분과 전공자들이기에 심도있는 학문적 논의가 분과별로 진행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이런 경향성은 부득이한 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나 현황 분석을 주목적으로 삼는 연구물의 오디언스는 전공분과와 상관없이 상당부분 겹치게 마련이고, 이 연구물들이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화를 공통 주제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공동연구 등을 통해 지역학적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 연구 전반에 폭넓게 적용 가능한 개념

1) 이 글은 지역학 또는 각 분과의 이론적 논쟁/담론에 참여하거나 주요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를 이론/학술 지향적 연구로, 이론적 틀이나 개념 대신 (학계 포함) 관련 업계 실무자나 기업인, 일반 대중에게 현황 소개나 정보 제공에 더 유용한 연구를 정책 지향적 연구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각 연구 생산물들의 주 목적과 주장, 연구 구성방식을 검토하면서, 연구물들이 상대적으로 어느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어떤 오디언스에게 더 유용할지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며, 저자는 여기서 두 목적의 상호배타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나 답론 생산을 새롭게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역학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초분과적인 노력, 또는 분과 학문의 간극을 줄이는(interdisciplinary) 연구물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즉, 지난 20년간 한국의 아세안 연구물들은 많은 경우 각 분과 학문에서 사례연구로 진행되는 방식이 주도적으로 채택되어왔다.

이와 연결하여, 지난 20년간 한국 아세안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특징은 동남아 각국의 국내 정치, 경제, 사회 이슈와 아세안 또는 동남아 지역화를 연계하여 관찰하는 연구물들이 상당히 적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 연구물들은 지금까지 각 연구자가 개별 분과에서 관심을 가지는 주제에서 출발하여 아세안을 연구 이슈의 지역 사례로 보고 접근한 결과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각국 주요 행위자들이 아세안 또는 여타 동남아 지역협의체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이들 협의체에 대응하고, 저항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다룬 연구는 지난 20년간 손에 꼽을 정도이다.²⁾ 아세안 연구가 다층적으로 축적되려면 지역체로서 아세안과 각 회원국 간의 관계 동학에 대한 지속적이고 깊숙한 관찰과 분석이 요구된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각 회원국의 대아세안 외교라던가, 아세안 통합 관련한 국내 정치사회적 이해관계 투쟁, 각 회원국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초국가적 역내 환경 거버넌스 등, 아세안과 관련하여 회원국 내 또는 소지역 내 정치사회적 동학을 보여주는 연구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분과 이슈 전문가가 현상적 이벤트나 정책적 모멘텀 덕분에 생산하는 단발적 사례 분석보다는, 동남아 일국 또는 소지역을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관찰해온 전문가들의 지역학적 관찰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20년간 아세안 또는 동남아 지역주의 연구가

2) 저자의 검색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동남아 일국과 아세안(또는 동남아지역협의체)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에는 박은홍(2006), 장준영(2006), 김규식(2013), 윤정현(2015, 2016), 공재형(2016), 백용훈(2017), 이요한(2017), 채현정(2019) 등이 해당된다. 양적으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 동남아 지역학자들(일국 또는 소지역 전문가)의 학문적 관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IV. 이슈별 연구 경향

1. 정치외교 분야

냉전과 탈냉전을 거치며 복잡하게 변화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국제관계가 아세안의 창설과 발전의 핵심적인 추동 요인이었던 만큼, 한국의 아세안 연구는 정치외교적 이슈를 다루는 데서 시작하였으며, 여러 비아세안 주요국 정부의 외교정책, 전략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아세안 연구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20년간 가장 꾸준히 연구물이 축적되었던 분야이기도 하다. 또한 학문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논문들과 정책 독자층을 타겟으로 하는 논문의 비율도 계속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많은 논문들이 국제관계학에서 다루는 핵심 개념이나 현실주의, 제도주의, 구성주의와 같은 분석틀을 아세안과 동남아 지역주의 사례에 적용하거나, 국외 연구물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경험적 질문을 연구하려는 시도를 통해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외교 분야의 연구물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지난 20년간 동 분야 아세안 연구물들은 그 논의의 주제가 좁은 이슈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정치외교 이슈를 다룬 연구물들은 양적으로 꾸준히 축적되고 있지만, 그 연구물들의 상당수가 다루는 주제는 크게 (1) 아세안의 형성과 작동원리, (2) 아세안이 주도하는 여타 지역협의체, (3) 강대국 세력분포 변화와 아세안의 대응, (4) 주변국(주로 중국, 일본)과 아세안 관계로 좁혀진다. 논문들이 다루

고자 하는 주제가 다변화되거나 확장되는 속도가 더딘 대신 각 핵심 주제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러한 경향성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많은 경우에 비슷한 주제를 다루면서 시기를 다르게 하여 관찰하거나, 적용하는 이론틀이나 집중적으로 논하는 개념을 달리하여 논문의 구성에 차별화를 두는 식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치외교 분야를 다루는 한국의 아세안 연구물들의 많은 경우, 국제적 수준에서 진행되는 이론적 논쟁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개념을 생산하는 등의 작업에는 많이 관심을 두지 않아 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세안 연구자들이 다루어온 연구 질문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것과 더불어, 이 논문들이 주목하는 이론적 담론의 폭 역시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아세안을 제도로서 공부하는 연구물들은 현실주의와 제도주의, 구성주의적 이론틀을 활용하거나, 다자주의나 레짐 이론의 일부에 기대는 경향이 컸다. 반면, 아세안의 제도적 실효성을 평가하거나, 아세안 수준의 레토릭과 행동의 간극을 설명하고, 담론 분석(discourse analysis), 영국학과 국제질서론, 프랙티스 이론, 맑스주의 등 비판 이론 등 대안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려는 시도는 아직까지 많이 찾아보기 어렵다. 1990년대부터 글로벌 지역주의 논의에서 주목받았던 소국 외교 문헌이나 중견국 외교론, 다른 대륙 지역협력과의 비교 지역주의 담론에 관여하는 논문도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자유주의, 신고전 현실주의 등에서 전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국내 정치사회적 동학과 국제제도로서 아세안의 연결고리를 살펴보는 연구물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국제 정치경제학에서 가장 주목하는 주제로서, 국외에서는 호주 및 영국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한동안 동남아 지역주의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한국의 아세안 연구에서 오랫동안 소외되고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아세안 연구가 동남아 일국 전문가들의 학문적 주

목을 받지 못했던 탓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경향성 자체를 문제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아세안 연구의 논쟁과 이론적 발전이 국외 이론을 수입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되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 내부에서 아세안 연구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개념을 만들거나 이론화가 진행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의 대화가 진행된다면, 외국 이론을 수입, 적용하는 방식보다 더 혁신적인 발전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사실, 예외적으로 이러한 시도가 진행된 적이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국내의 동남아 지역학자들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공동체와 관련한 학문 집단이 구성되어 동아시아 공동체 외교에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태동하기도 했다(신윤환 2009; 박승우 2012;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2014; 박사명 2014; 김기석 2015). 동일 주제 관련한 중국과 일본 학계와 의지를 모아, 서구의 이론을 따르는 대신 동아시아의 지역을 새롭게 구상하는 학문 공동체도 추진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주변국 외교 기조가 보다 단호해지고,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고, 한중일 간 역사 및 영토 분쟁이 표면화되면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정책적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의 정책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지금은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의 성장을 위해 추가적인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정치외교 분야 아세안 연구 가운데 주변국과 아세안의 외교 관계에 대한 관심은 꾸준한 반면, 한국과 아세안 외교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양적으로 매우 소수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치외교 분야 연구물 가운데, 주변국의 대아세안 외교를 주제로 다룬 논문은 약 22.4%를 차지한다. 특히 중국과 아세안 관계, 일본과 아세안 관계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여러 연구자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연구는 중국과 일본 전공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주변 주요

국들의 지정학적 계산에 아세안이 어떻게 포함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정치외교 이슈를 다룬 논문은 지난 20년간 10편이 채 되지 않았다.³⁾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대부분의 한-아세안 관련 연구는 경제 무역 이슈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4강 중심 한국의 지정학적 외교 구상에 아세안이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한국과 아세안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은 2010년에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하는 안을 구체화하기 전까지는 실제 정치안보 관련한 한국의 대아세안 전략이 경제적 파트너십에 비해 경시되거나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된 탓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외교 정책 및 전략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연구관심의 대상에 조금씩 편입시키기 시작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오랫동안 한국과 아세안이 연결된 정치안보 분야 연구는 주로 ARF(ASEAN Regional Forum), EAS(East Asia Summit), APT(ASEAN Plus Three), 동아시아 공동체 등 다자지역주의에 관한 연구물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곤 했다. 최근 5년간 한-아세안(정치외교) 관계 연구물 역시 차근차근 생산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성의 변화가 장기간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하다.

이뿐 아니라, 연구 질문이 몇 가지 주제에 집중되던 과거와 달리, 논의 주제의 범위도 조금씩 넓어지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발표된 글들 가운데 흥미로운 연구 사례를 들어본다면, 최근 공개된 한국 외교문서를 통해 아세안과의 외교 관계를 분석한 연구(김형중 2016)라든가,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동남아의 대테러 지역협력 거버넌스의 특징을 살펴보는 연구(윤정현 2015), 대미얀마 인권외교 관련 아세안의 전략을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는 글(이시훈·임은정 2017), 아세안 일

3) 필자의 검색에 따르면, 서정인(2012), 변창구(2013), 김형중(2016, 2020), 최재택(2020), 배기현(202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부 국가들의 난민정책을 비교하면서 지역 거버넌스를 중요한 요소로 다루는 연구(서지원 2018) 등이 있다. 이들은 기존 아세안 연구의 전형적인 논의에서 다루지 않은 데이터와 이슈 영역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2.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연구

아세안 연구물을 주제로 분류해볼 때 외교와 더불어 가장 많이 논의된 분야가 경제통합, 무역, 금융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경제 분야 연구 역시 아세안 경제공동체 선언, 한-아세안 FTA 등과 같은 굵직한 외교 이벤트의 모멘텀을 따라 성장해왔다. 그림 2와 3에서처럼, 정치외교 분야의 연구물은 20년간 꾸준히 비슷한 양적 수준을 유지하며 축적되고 있다면, 경제 분야의 연구물은 최근 5년간 그 숫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그 배경에는 외교 논의가 현실 정책으로 옮겨지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분야가 경제 협력인 까닭이 있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대아세안 외교는 상당 기간 동안 경제, 개발 협력에 치우쳐 있었던 만큼, 한국의 여러 연구자들에게 대아세안 경제협력 또는 아세안 경제통합은 관찰 가능하고 흥미로운 연구대상임이 틀림없다.

그렇지만 정책적 모멘텀에 의해 무역 및 해외투자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만큼, 아세안에 대한 관련 학계의 관심이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을지,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사라져도 지금과 같은 연구물의 축적 과정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론적 모형과 접근들을 활용한 연구물보다 정책 수요에 기여하는 연구물의 편수가 약 1.5배 높다는 점에서도, 정책적 모멘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경제통합과 관련 경제협력 구상들을 계기로 아세안 지역을 관찰하는 연구진 풀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정치외교 분야 연구와 마찬가지로, 경제 분야 역시 연구자들이 던지는 질문은 몇 가지로 집약되는 경향을 보였다. 우선 아세안의 제도적 발전이 관찰되는 분야가 경제협력인 만큼, 아세안 내부의 자유무역지대 형성 논의에서부터 경제공동체 선언까지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무역 및 해외 투자에서의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또한 중국, 일본, EU와 같은 주요 경제 체제와 아세안 간의 무역 협정 및 대아세안 원조, 해외투자 패턴 등에 관한 연구 역시 2010년대 후반부터 논의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외교 분야와의 뚜렷한 차이라고 한다면, 경제 분야 아세안 연구물 중 약 43.7%가 한-아세안 무역과 투자, 금융 관계에 관한 연구라는 점이다. 정치외교 연구물 중 한-아세안 정치안보 관계를 다룬 연구가 6%를 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주로 한-아세안 FTA의 효과, 한-아세안 FTA 협정문 및 규정, 한-아세안 FTA와 무역구조 및 산업경쟁력 변화 등에 분석이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주제와 마찬가지로 2017년 이후에 출판이 몰려있는 상황이다.⁴⁾

그러나 최근 5년간 출판물 가운데에는 소수이지만 새로운 연구 주제를 심화하여 다루는 연구들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동남아의 연무 오염 관련 협력을 거래비용적으로 접근하거나(김진아, 이재우 2016), 아세안 역내무역을 다른 지역경제협력체인 NAFTA, MERCOSUR, EU 등과 비교하고(나희량 2015),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 및 보호무역 조치를 연구하거나(나희량 2019a, 2019b), 아세안에 대한 해외은행 직접투자(채상수 · 이충열 2020)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무역, 금융 분야와 대조적으로, 개발이나 ODA 관련하여 아세안을 분석 단위로 진행한 연구물은 소수다.⁵⁾ 개발 관련한 이슈는 동남아 연

4) 대표적인 연구물로는 고종환(2007), 손용정, 김현덕(2013), 김미아(2017), 박현희(2017), 박선화, 남현정, 김대중(2019), 이용완, 허윤석(2019), 최영석(2020) 등이 있다.

5) 예외적으로 손혁상, 최정호(2008), 현민(2019) 등이 있다.

구에서 오래전부터 핵심적으로 다루어온 주제이나, 아세안 지역주의와 개발 이슈를 연계하여 다루는 연구는 한국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여전히 많지 않다. 실제 초국가적 단위의 개발협력 또는 원조 경향이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활발하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통합이나 자유화 이슈는 정치학이나 사회학, 인류학적 분석에서 오랫동안 주목해온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세안 연구에서는 아직 정치경제, 경제사회학, 경제인류학적 접근 방식 등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정치외교 이슈는 전통적인 국제관계 전공자가 주도하고 경제 분야 아세안 연구는 경제학자가 주도하는 분과별 접근 방식에 비해, 초국적 경제교류 현상을 인류학자나 사회학자가, 또는 경제통합 및 무역관계를 정치학자가 분석하는 시도가 많지 않다. 특히 학제적인 연구는 결과를 생산에 시간이 필요하고 공동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아세안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시도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의 아세안 연구는 주로 정치와 경제 이슈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주, 시민사회, 노동, 정체성, 교육 협력 등과 같은 사회문화 분야 연구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매우 더디다. 그림 3에서처럼, 지난 20년간 아세안 관련 출간된 주요 학술 논문의 약 9% 정도만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국내 아세안 연구가 분과학문 주도적 성향이 강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동남아 지역주의에 대한 인류학이나 사회학 연구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물론 아세안 및 지역 거버넌스 진화가 지난 50년간 정부와 기업 주도적으로 진행되어온 만큼, 지역통합이 실제 시민들의 삶에 눈에 보이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아세안 경제공동체 또는 아세안 차원의 영해 분쟁 관리 노력 등이 본격적으로 언론에서 다뤄지기 시작하고, 일부 계층 시민들이 동남아 역내 질서 변화가 본인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을 보다 가까이 인지하기 시작한 때가 2010년 중반 이후라고 본다면, 국내 아세안 연구물의 이슈

편향성은 당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물론, 2010년대 초중반 연간 평균 1편 정도씩 출간되던 것에 비해, 2017년 이후 연간 3-4편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도 교역과 개발 이슈를 사회학 또는 인류학적 연구들이나 개념으로 해석하는 학제적 연구가 최근 들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초국가적 성장지대와 개발협력(현민 2019), 아세안 통합과 국경지역 경제교류(채현정 2019), 한국의 메콩 개발협력과 이주의 연계성(백용훈 2020)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던 학제적 연구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지만, 이런 변화가 사회학 연구자들이 아세안 또는 동남아 지역주의 연구에 보다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면 더욱 반가운 일일 것이다.

V. 결론

이 글은 지난 20년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국내 아세안 관련 연구물들의 동향을 시기별, 이슈별로 관찰하고 연구의 경향성과 주목할 만한 특징, 한계점 등을 살펴보았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아세안 연구물들은 한국과 아세안을 둘러싼 외교 정책적 모멘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성장해왔다. 그런 까닭에 이론이나 학문적 담론에 기여하는 연구물 못지않게 정책 지향적 연구물도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 오히려, 2010년대 중후반 들어서면서 아세안 경제통합 노력이 보다 가시화되고 신남방정책이 새롭게 집행되면서 경제와 사회 이슈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지향적 연구물의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다만, 동남아시아라는 공통 지역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내 아세안 연구물 대다수가 세부 분과 전공 중심으로

논의를 생산해오다 보니, 학제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정치외교 및 경제 분야의 연구 논의가 아세안 연구를 주도해왔으며, 연구 대다수가 몇 가지 연구 주제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양적인 성장에 비해 주제의 다각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리뷰는 앞으로 국내 아세안 연구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보여준다. 우선, 아세안 연구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는 중요할 것이다. 아세안 연구자들이 직접 현지 조사를 진행하거나 국외 학계와도 교류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들어 정치, 경제, 사회 전 이슈에 걸쳐 기존의 전형적인 연구 주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이러한 변화가 단지 정책적 모멘텀에 영향을 받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대학원생 및 신진 학자들의 지속적 유입이 있어야 하고, 기존 학자들도 아세안을 이론 적용의 사례로만 취급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애정과 비판 어린 시선도 놓지 않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치와 경제 관련 논의에 편중되어 있었다면, 초국경적으로 확장되는 삶의 공간으로서 아세안 내부의 다층적인 사회 변화 그리고 문화 동학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 수준과 접근 관점에 있어서도 다각화가 요구된다. 이는 국내 아세안 연구가 체계적인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것이다. 연구 질문이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두고 학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고 공동의 연구 노력이 있다면, 어쩌면 연구 범위가 확장되지 않더라도 학문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국내 연구진 사이의 학술적 논쟁이 진행되거나 공동의 학제적 노력이 시도된 사례는 많지 않다. 이러한 학제적 연구와 더불어, 다층적 분석에 대한 시도 역시 아세안 연구의 발

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아세안 연구는 아세안 역내의 국제적 교류, 또는 아세안과 주변국의 관계 수준에만 분석을 집중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업, 시민사회, 이익 집단 등,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협의체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하고, 아세안을 둘러싼 글로벌 지형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각 아세안 회원국 내 정치사회적 동학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동남아 지역을 구성한다. 이들의 상호작용과 동학은 아세안과 동남아 초국적 지역 형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필수적일지 모른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까지 한국의 아세안 연구는 양적, 질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세안학’의 단계에 닿기까지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분석 층위에서뿐만 아니라, 접근 방식에서 있어서도 다각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세안의 흥미로운 발전 양상을 관찰하다 보니, 지역주의가 발현하는 단위로서 아세안을 다른 지역 단위와 비교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또한 한가지 개념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절충적(eclectic) 이론화 역시 아세안 연구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외의 대안적 비판 이론가들을 초대해 새로운 분석틀을 적용해보려는 전향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위의 제안들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동남아를 연구하는 지역학자들의 구체적인 관심과 노력일지 모른다. 아세안 연구의 범위가 확장되고 내용이 심화되려면, 동남아 각국의 국내 행위자들과 사회 동학이 아세안의 발전과 쇠퇴에 어떤 영향을 받고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세안 연구의 이슈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인류학, 사회학, 개발학, 종교학을 다루는 동남아 연구진의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아세안 연구가 일시적 흥행 이후 쇠퇴하지 않으려면, 여러 분과 학문 연구자들이 정책적 모멘텀이 끝난 이후에도 이 지역에 주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적 자극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연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결국 모든 아세안 연구의 공통점이 ‘지역’인만큼, 동남아시아를 연구의 대상이자 목표로 바라보는 지역학 연구진이 중심이 되어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결국 아세안 연구의 향후 성장에 대한 전망은 동남아시아를 학문의 단위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환경의 발전에 달려있을지 모른다.

투 고 일: 2021년 1월 07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2월 07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2월 07일

참고문헌

- 고종환. 2007.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제지역연구』 11(3): 387-417.
- 공재형. 2016. “아세안경제공동체 통상환경이 캄보디아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7(2): 169-186.
- 김규식. 2013. “태국의 아세안 교육.” 『동남아연구』 23(1): 105-126.
- 김기석. 2015. 『동아시아 공동체로의 머나먼 여정』. 서울: 인간사랑.
- 김미아. 2017. “한-ASEAN FTA의 무역확대 효과.” 『무역연구』 13(4): 337-356.
- 김진아·이재우. 2016. “환경협력의 거래비용적 접근법: 동남아시아 연무 오염 사례 연구.” 『경제연구』 34(1): 79-107.
- 김형중. 2016. “한-아세안 대화 관계와 아세안 규범: 1980년대 초반 외교 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6(4): 39-76.
- _____. 2017. “한국의 아세안 연구: ‘아세안학’의 모색?” 『아시아리뷰』 7(1): 199-225.

- _____. 2020.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와 신남방정책: 아세안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30(3): 21-54.
- 나희량. 2015.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아세안 역내무역 분석 및 시사점: EU, NAFTA, MERCOSUR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연구』 25(1): 31-84.
- _____. 2019a.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 연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연구』 29(4): 91-141.
- _____. 2019b. “아세안의 보호무역조치 연구: 비관세조치 및 특정무역협안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44(3): 43-72.
- 동아시아 공동체 연구회. 2014. 『동아시아 공동체: 동향과 전망』.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박사명. 2014. “아세안 공동체와 동아시아 공동체.” 『동남아시아연구』 24(3): 1-44.
- 박선화·남현정·김대중. 2019. “ASEAN 회원국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리뷰』 10(3): 147-158.
- 박승우. 2012.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공동체 논의와 최근의 정세 변화.” 『동아연구』 62: 11-48.
- 박은홍. 2006. ““아세안 방식”(ASEAN Way)과 동남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역할 변화: 주권, 개발, 인권의 갈등적 공존과 그 진화.” 『동남아시아연구』 16(1): 119-147.
- 박현희. 2017. “한아세안 FTA 농산물 부문의 수출결정요인 분석.” 『관세학회지』 18(4): 219-236.
- 배기현. 2020. “Divergent Ideas, Distant Friendship: Assessing Korea’s 30 Years of Political-Security Diplomacy with ASEAN.” Korea Observer 51(4): 523-550.
- 백용훈. 2017. “AEC 출범 이후 베트남 경제의 기회와 도전.” 『국제지역연구』 21(4): 101-124.

- _____. 2020. “한-메콩 협력과 이주와 개발의 연계성: 메콩지역 인구의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30(2): 287-325.
- 변창구. 2013. “이명박 정부의 다자안보외교와 ARF.” 『한국동북아논총』 67: 5-20.
- 서정인. 2012. “한국의 대아세안 외교.” 『동남아시아 연구』 22(1): 279-308.
- 서지원. 2018. “아세안 국가의 인도차이나 난민정책에 대한 연구(1975-1996).” 『국제정치연구』 21(1): 151-169.
- 손용정·김현덕. 2013. “패널분석을 이용한 한ASEAN FTA의 교역효과 분석.”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9(3): 95-111.
- 손혁상·최정호. 2008. “한국의 대아세안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경제협력’과 ‘개발협력’의 이중주.” 『동남아시아연구』 18(2): 137-171.
- 신윤희. 2009. “동남아의 지역주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그 역사에 대한 재해석.” 『동아연구』 56: 107-137.
- 윤정현. 2015. “폭탄테러와 아세안의 재난 거버넌스: 싱가포르 네트워크 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5(2): 153-190.
- _____. 2016. “초국경적 대기오염 이슈와 글로벌 거버넌스: 인도네시아 연무 해결을 위한 싱가포르의 대응전략.” 『세계지역연구논총』 34(1): 51-79.
- 이시훈·임은정. 2017. “對미얀마 인권외교 네트워크의 재편: 주요행위자로서 ASEAN의 전략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7(1): 269-310.
- 이요한. 2017. “AEC 내 태국의 산업정책과 기업 진출: 생산 물류 허브를 꿈꾸는 태국.” 『한국태국학회논총』 23(2): 131-167.
- 이용완·허윤석. 2019.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 분쟁에 관한 사례 연구-조세심판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연구』 42(1): 229-254.
- 장준영. 2006. “미얀마-아세안 관계 발전: 아세안의 정책변동과 미얀마 군사정부의 대응.” 『동아연구』 50: 450-481.
- 채상수·이충열. 2020. “아세안에 진출한 해외은행에 관한 연구: 직접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연구』 30(2): 187-247.

채현정. 2019. “국경의 다중성 개념을 통해 본 아세안 지역경제협력의 국경자유화 정책: 태국 북부 치앙라이 국경교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52(1): 213-261.

최영석. 2020. “한아세안 FTA 발효에 따른 산업내 무역구조 변화: 양적 및 질적 변화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3(3): 125-154.

최재덕. 2020. “미중패권경쟁의 전망과 한국의 외교전략: 아세안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35(2): 173-204.

현민. 2019. “아세안의 발전주의적 지역개발협력과 역외의존적 지역개발.” 『세계지역연구논총』 37(3): 253-295.

Abstract

ASEAN Studies in Korea (2001-2020): Reviews and Suggestions

Ki-Hyun BAE
Sogang University

Following the notably increasing attention among Korean academics on ASEAN and related international affairs,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studies on ASEAN (and ASEAN-related multilateral arrangements) published in the Korean academic journals for the past 20 years. Specifically, the article explores how ASEAN-related research has developed over the years and tries to identify some achievements and missing holes among the major studies. Some practical suggestions follow the review in order to fill these missing gaps and to make further progress for so-called “ASEAN studies” as a promising field of the East Asian studies in Korea.

Keywords: ASEAN, East Asia, Southeast Asia, Multilateralism,
Literature Review

